

검찰 '보완수사권' 이나 '보완수사 요구권' 이나 갑론을박

민주, 비공개 정책의총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토론
이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에 '예외 인정' 공감대 기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들려싼 검찰의 권한 문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논란의 핵심인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의총에서도 이 대통령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동시에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며 "크게 보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정 의견에 쏠리지 않고 찬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며 "정부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찬반 양론이 활발히 개진됐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여러 의원이 이 대통령이 말씀한 취지대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다른 의원들은 '대통령 말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도 다른 해결 방안이나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개혁 논의의) 초반부터 정부·여당으로서 국가 운영, 검찰의 인력 재편 등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다"며 "(강경한 입장은 방송이나 유튜브 등) 대외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그런 입장이 많이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는 언론에서 인식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다른 인식과 함께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의원들의 의견 개진에 도움이 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의원들) 본인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말을 귀기로 삼는 경우가 많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모든 분이 동의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인정하고, 어떻게 이를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을까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26일)이 아니라라도, 국회와 정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대통령 "검찰 개혁은 국민 삶 위한 것"

靑 수보회의서 원칙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쟁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해 제시했던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필요로 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며 "효율적이지만 낭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초 제도를 만들자"고 언급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부여에 비판적인 입장은 견지하는 것을 계기해 이 대통령이 연이틀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여러 의원이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대로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의견을 냈지만,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다른 방안이나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특정한 사안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서 통일교·공천현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어드레째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장동혁 국힘 대표, 단식 8일만에 중단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해 중단 권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공천현금 의혹 특검 촉구하며 시작한 단식 농성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휠체어를 타고 입장 발표를 한 뒤 본청 앞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타고 양지병원으로 이송됐다.

장 대표는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 당원동지들, 국민과 함께한 8일이었다.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응원하는 마음 잊지 않겠다"며 "좀 더 길고 큰 짐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둘째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단식 투쟁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단식 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묵묵히 두 손을 모으고 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 듣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中, 코스피 5000 돌파에 "후속 입법 박차"

3차 상법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 선을 돌파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축하하며 3차 상법개정안 등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출범 46년 만의 대기록"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경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대도약 5대 대전환 성장 전략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코스피는 5000을 돌파했다"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난 지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습니다.

다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당정이 '원팀'이 돼 실행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SNS에서도 코스피 5000 돌파를 환영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스피 5000 시대의 꿈은 이뤄진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함께 가자"고 적었다.

다만 코스피 상승과 함께 환율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동시에 나왔다.

재경위·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자산시장이 강세이지만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지금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조합은 아니다"라며 정부에 환율 안정 대책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늘 이혜훈 인사청문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2일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일단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겹침 부실을 날낱이 알려드리겠다"며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간접질, 90억대 아파트 부정청약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간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여세 의혹, 반포 월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종-166683호]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광고]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